



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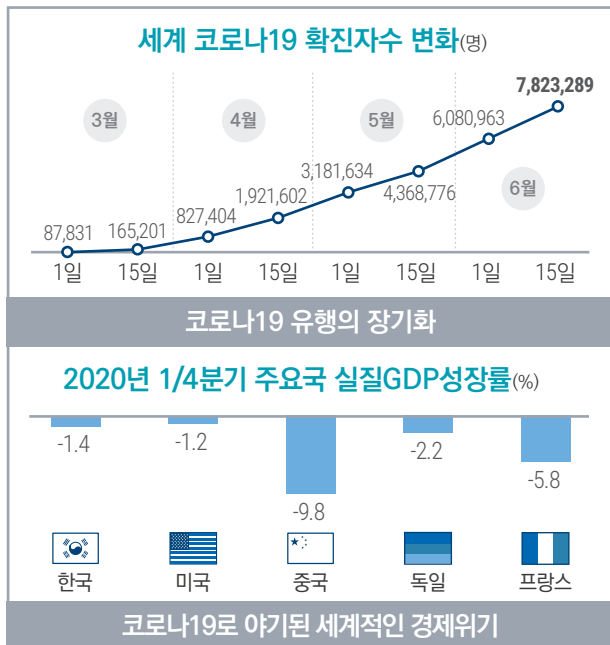
예산분석실

“ 정부는 6.4.(목)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하여 총 35.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, NABO는 추경안의 재원, 편성요건, 재정건전성, 경제적 효과 등을 심층분석하였다. 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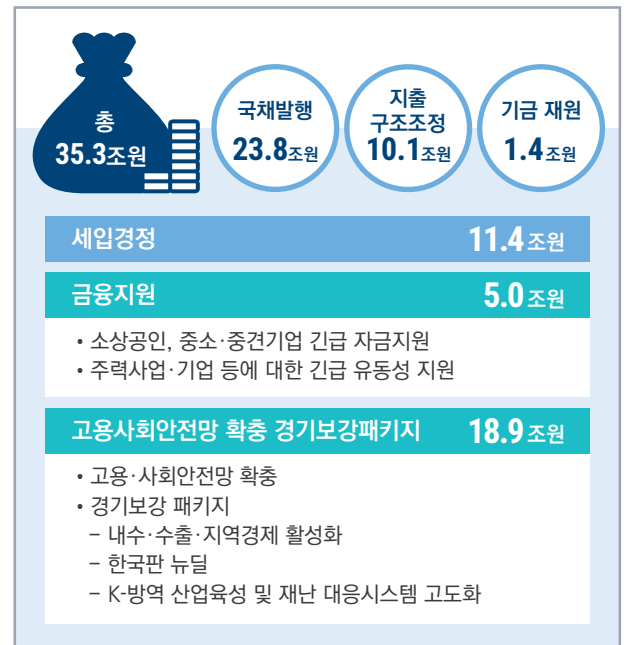
I. 총괄분석

1.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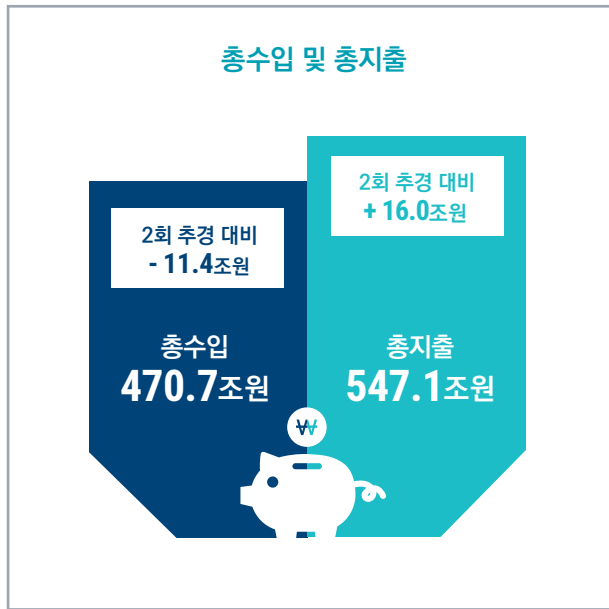
편성배경



규모 및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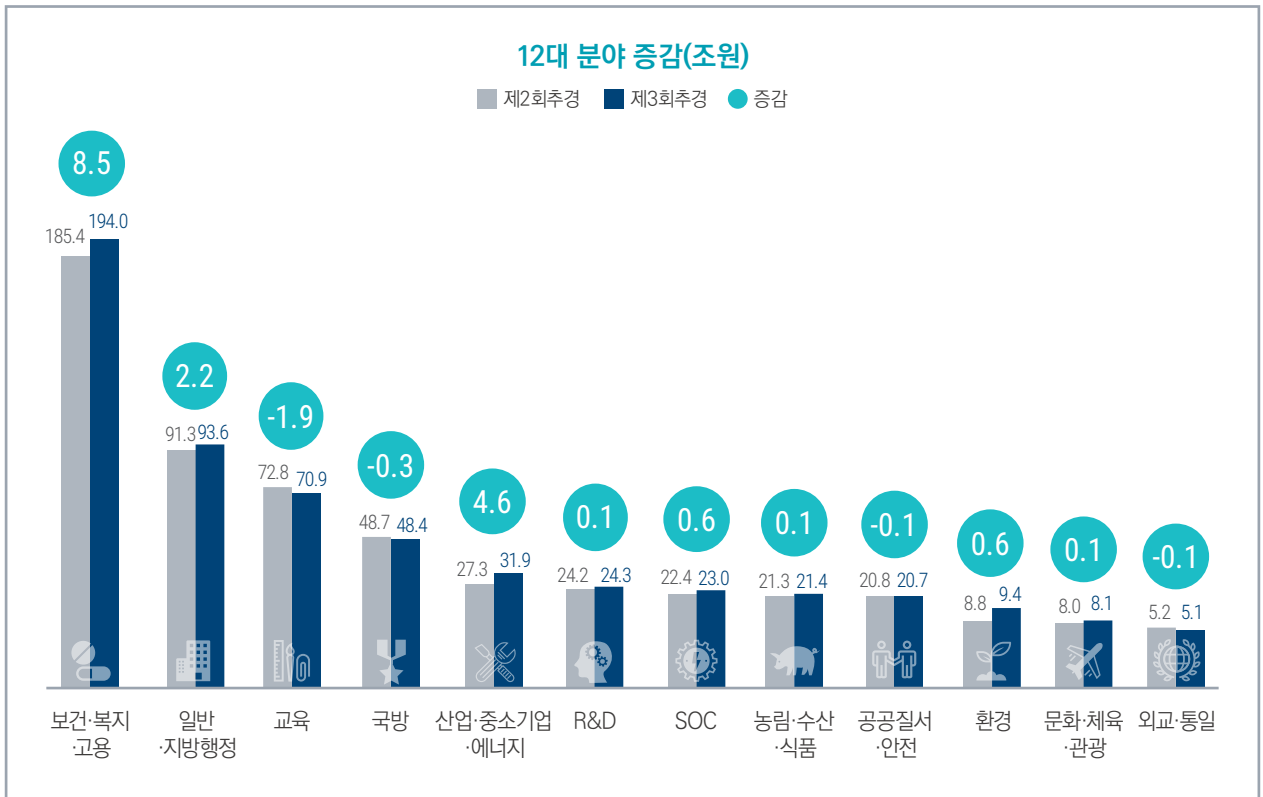


2. 재정총량



3. 분야별 자원배분

보건·복지·고용(8.5조원),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(4.6조원), 일반·지방행정(2.2조원)에서 크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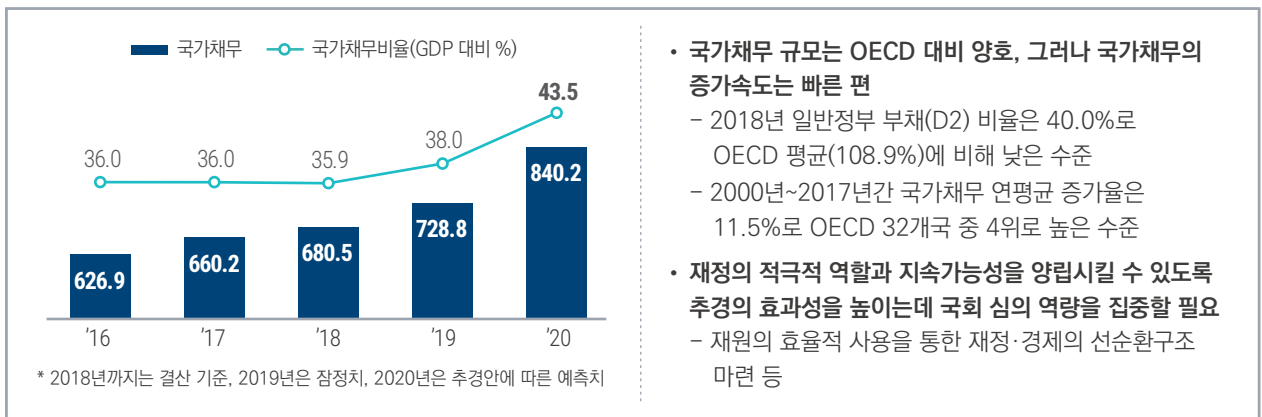


II.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항 분석

1. 편성요건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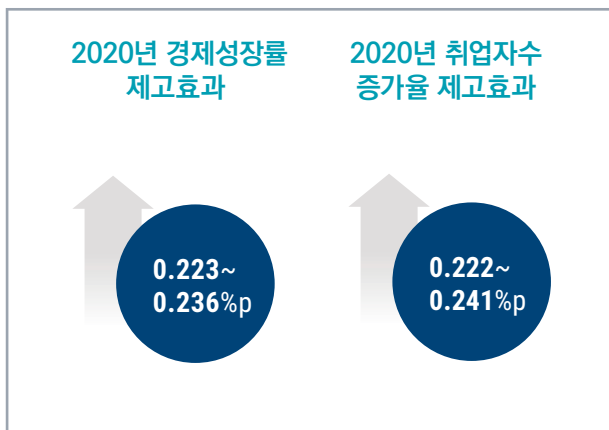
대규모 재해의 발생	- 코로나19의 확산은 2015년 메르스의 피해규모를 상회하는 「국가재정법」 상 '대규모 재해'에 해당 -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12,438명, 사망자 280명('20.6.22. 0시 기준)
경기침체·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	- 전세계적인 경제충격으로 인하여 경제위축 우려 2020년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.1%로, 2019년 성장률(2.0%) 대비 1.9%p 감소 - 전년 4분기 대비 2020년 1분기 취업자수 64.4만명 감소 - 소비자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격히 냉각 * CSI: (1월)104.2 → (2월)96.9 → (3월)78.4 → (4월)70.8 → (5월)77.6

2. 재정건전성 분석



3. 경제적 효과 분석

세출예산이 연내에 100% 집행된다는 가정 하에 경제적 효과 추정



4. 국세수입 감액경정 분석

(NABO전망) '20년 국세수입은 추경안에 따른 정부 전망 보다 3.0조원 부족 예상

국세 수입 비교			
구 분	제3회 추경안	NABO 전망	차 이
국세	279.7	276.7	△3.0
소득세	88.5	87.0	△1.5
법인세	58.5	58.3	△0.2
부가가치세	64.6	63.7	△0.9
개별소비세	9.5	9.2	△0.3
관세	7.7	7.2	△0.5
기타	51.0	51.4	0.4

III. 주요 정책 분석

1.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 분석

고용안정 특별대책 편성 규모

구분	규모
재직자 고용유지	1.0조원
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안정	0.8조원
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	3.6조원
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	3.5조원
총 규모	8.9조원

•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

- 일자리(55만개) 공급 필요성은 있으나, 유관사업 규모 고려 필요
 - * 본예산 직접일자리 잔여규모(약 10만개, 4월말 기준), 지자체 자체일자리 사업 확대분(약 7만개 이상, 6월 이후 기준), 구직급여 등 구직지원 프로그램(약 82만개)
 - * 실업자수 규모(127.8만명, 5월말 기준)

•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의 중·장기적인 관리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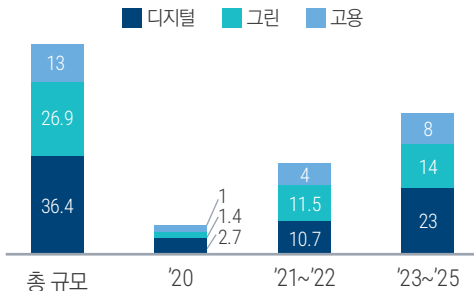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
 - * 2017년 기준: 우리나라(24.4%) / OECD평균(11.5%)
- 지속될 우려가 있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 검토 등 관리 필요

•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의 공개 필요

- 2019년 2017~2018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
- 총괄적인 평가결과만 공개 중으로, 세부 결과 공개 필요

2. 한국판 뉴딜 분석

한국판 뉴딜 연차별 투자계획



•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일부 사업 보완 필요

• 중·장기적 시계를 가지는 정책군으로, 신산업·신기술 육성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구성할 필요

•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필요

- 한국형 뉴딜은 '25년까지 실시하는 대규모 미래전략 사업으로,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 모색 필요
 - *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9개 사업

3.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조치 분석

금융안정 패키지 편성 규모

구분	규모
정책금융기관의 기업자금 공급 확대	2.0조원
회사채·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	2.8조원
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	0.1조원
총 규모	5.0조원

• 지원대상 기업 범위의 적정성·지원기준 논의 필요

- 신용경색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취지, 최근 침체된 채권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 지원대상 검토 필요
- 다만,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한계기업 선별 필요

• 소상공인 대출의 수탁은행별 금리 차이 최소화 필요

- 은행마다 금리조건이 달리 운용되는 문제 존재
 - * 은행별 최저금리('20.6.12.기준): 2.46%~3.21%